



제6차 청년학포럼

대선후보 청년공약 실현가능한가? :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말하다

| 일 시 |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청년학포럼

■————— 순 서 —————■

■ 개 회 사

■ 인 사 말 김 도 형 (청년학포럼 대표)

■ 축 사 조 동 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사 회 연 강 흠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발 제

- 백 경 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김 원 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주제토론

- 송 헌 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이 필 우 (변호사)
- 윤 문 원 (작가)
- 권 용 태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
- 조 승 수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발표 1. 대선후보 청년공약의 평가:청년들은 이것을 원한다

- 백 경 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07

■ 발표 2. 청년공약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방향

- 김 원 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3

■ ROUND TABLE

- 송 헌 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이 필 우 (변호사)
- 윤 문 원 (작가)
- 권 용 태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
- 조 승 수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



대선후보 청년공약 평가:청년은 이것을 원한다.

백 경 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대통령 후보자들, 목 놓아 청년을 부른다.”

네이버 트렌드 조사 :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청년 트렌드 비교(최근 3개월)

STEP1
검색어 트렌드 조회

STEP2
사용자 데이터 융합

STEP3
데이터 공유하기

STEP1

네이버에서 얼마나 많이 검색되는지 궁금한 주제가 있으신가요?

궁금한 주제어를 설정하고, 하위 주제어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콤마(,)로 구분 입력해 주세요. 입력한 단어의 추이를 하나로 합산하여 해당 주제가 네이버에서 얼마나 검색되는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예) 주제어 캠핑 : 캠핑, Camping, 캠핑용품, 겨울캠핑, 캠핑장, 글램핑, 오토캠핑, 캠핑카, 텐트, 캠핑요리

대상

☒ 네이버 통합 검색어 ☐ 네이버 쇼핑 검색어

전체 1개월 3개월 1년 직접입력 2017 02 - 2017 04

주제어1 문재인 문재인청년,청년정책,청년공약

주제어2 안철수 안철수청년,청년정책,청년공약

주제어3 홍준표 홍준표청년,청년정책,청년공약

주제어는 최대 3개 까지 설정 가능하며, 한 주제당 최대 20개의 검색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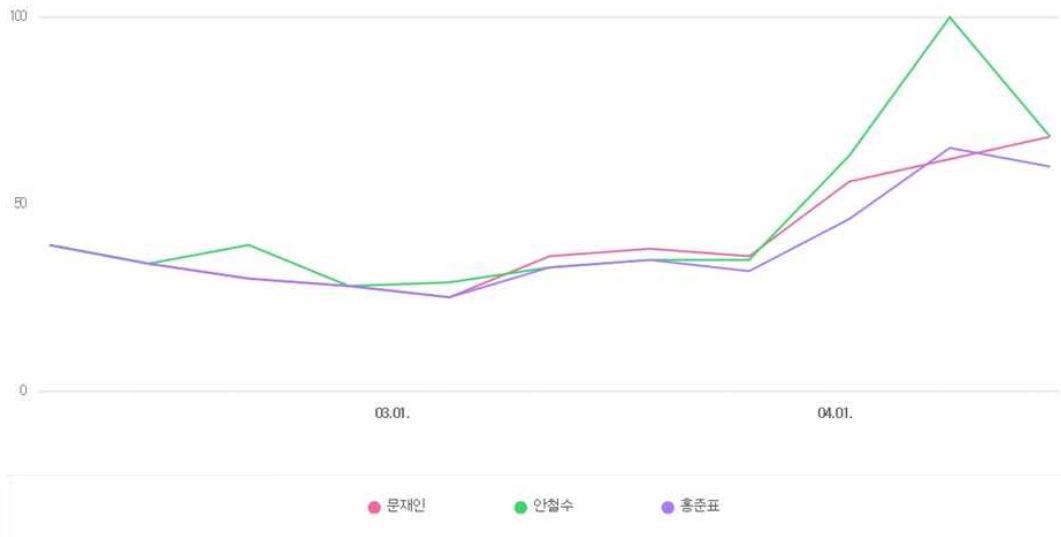
조회하기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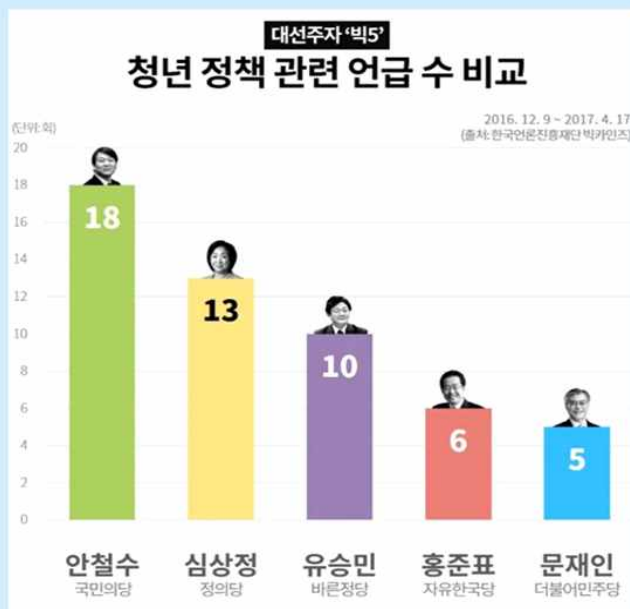
대선후보 청년공약 실현가능한가? :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말한다.

네이버 트렌드 조사 :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청년 트렌드 비교(최근 3개월)

- 관련 정보량 자체가 갈수록 높아짐



“청년청년한 대통령 누구?”



대선주자 청년정책 언급 수 빅데이터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 다른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 대선주자들은 앞 다투어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인지 확인이 필요

⇒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대선주자별 국가비전과 정책공약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2017 대선정책 트렌드리포트

블라인드 설문조사 분석

청년이여는미래



<2017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내용>

본 설문은 2017년 대선 정당별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을 블라인드 형식으로 정리한 설문조사입니다. 각 정책을 현실가능성, 미래지향성, 청년공감성으로 구분해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0문항)

- ▶ 조사기간: 2017.04.03. - 04.04
- ▶ 조사대상: 전국 20~30대 청년 500명
- ▶ 조사방법: 온라인 구글 설문
- ▶ 후 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 ▶ 투표기준
- ① 현실가능성: 현실적으로 공약이행이 가능할까?
- ② 미래지향성: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정책일까?
- ③ 청년공감성: 청년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정책일까?

청년이어는미래



블라인드 설문조사를 진행한 <청년 · 일자리 10대 공약>

1.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2.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달성'
3. 칼퇴근법
4.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 대기업 임금의 80%수준 보장
5.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6. 5-5-2년으로 학제개편
7. 국 · 공립대 공동 학위제
8.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지원
9.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 일자리 50만개 창출
10.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

청년이어는미래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공약에 대한 사라진 기대감

청년이어는미래가 꿈은 10대 청년공약 중 안철수의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지원>은 현실가능성 1위를 기록했지만 2.88점으로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었다. 10가지 공약 모두 현실가능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10가지 공약 현실가능성 점수가 대체로 낮았다. (최고 2.88점, 최저 1.92점) 공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되는데서 오는 낮은 기대감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한 청년들



점수가 낮게 나온 '일자리 ○○만개 창출, ○○원 지급'류의 공약과 단순 비교해보았을 때, 일자리와 임금의 양보다 일과 삶의 질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읽을 수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한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해볼 수 있었다.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 분석>

5-5-2년으로 학제개편 - 안철수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견제심리
안철수 <5-5-2년으로 학제개편>

청년이여는미래가 꿈은 10대 청년공약 중 안철수의 <5-5-2년으로 학제개편>은 청년공감성 9위를 기록했다.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며 현재 초중고대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정점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공감을 사지 못했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견제심리로 보여진다. 현실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은 다른 공약 평균 점수와 비슷하게 나왔다.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 분석>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 - 안철수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 문재인



✓ 선거 때마다 나오는 허세 공약에 대한 거부감

일자리 〇〇만개 창출, 〇〇원 지급' 류의 선거 때마다 나오는 허세 공약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채용은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과 검증이 어렵다.

안철수의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 대기업 임금의 80%수준 보장>은 5년 후는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공약으로 보인다.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줌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과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청년공감성에서도 상당히 낮은 점수(2.78점 8위)를 받았다.

대상자인 청년들조차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약으로 보인다.

現 공무원 100만명인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공무원 아닌 청년들에게는 헬조선을 만드는 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 분석>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 문재인



재활용된 문재인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특히 현실가능성(1.92점) 점수가 낮게 나왔다. 대학서열과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으로 보이나, 입시위주 교육과 학벌만능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서울대·지방 국공립대를 하나로 묶어 연합대학을 만들더라도 연고대, 포스텍, 카이스트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는 계속될 것이다. 서울대생 아닌 청년들도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야지, 모두를 서울대생으로 만들 일이 아니다. 이러한 반발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려다 후퇴한 바 있다.

⇒ 청년과 청년정책 간 미스매치 확인

⇒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



청년, 일자리 정책 그것이 알고 싶다

청년이여는미래



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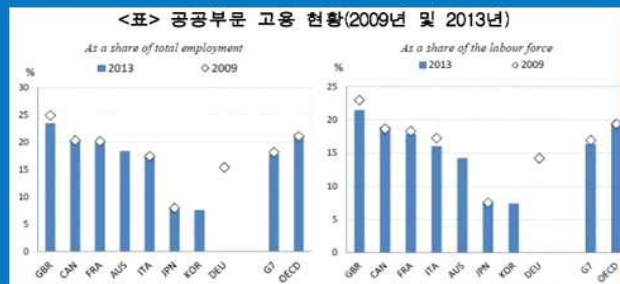
중소기업, 청년 2명 고용하면 3번째는 임금 전액지원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기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3년간 총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걱, 문재인 후보가 보여주지 않은 통계가 있다니”
 #이런식이면#문모닝_문에프터눈_문이브닝_문나잇
 : 쉽게 말해 공무원은 적는데, 인건비는 많이 든다는 것이다.



“공무원 아닌 청년들에게는 헬조선”

#공무원_공화국_각 #망한_그리스_각

: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두가 공무원인 세상이 아니라,
 공무원 · 삼성맨 · 정규직 아니어도 살만한 세상이다.

“우리가 마트 세일상품인가?”

#2명고용하면_1명지원 #투플러스원_각

: 기업 환경과 중소기업 경쟁력, 근로자 임금격차와 근로환경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임금지원만 해주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안철수의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고용보장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수준 보장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는 2년간 1200만원(월 50만 원씩)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상자는 최대 연 10만 명으로 5년간 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년 정도가 지나면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빈 일자리가 생겨
최악의 청년실업 시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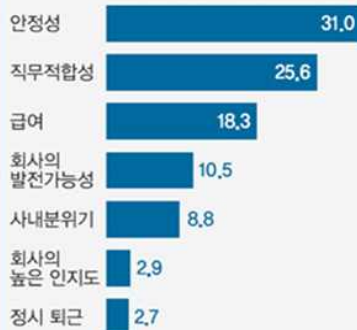
“임금만 보장해준다고 좋은 일자리가 되나?”

#5년후는_누가보장

#중소기업_망하는길 #청년도_망하는길

: 결국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되어야하는데,
한시적 임금보장은 이러한 근본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노동·산업시장을 왜곡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이 중시하는 일자리 특성
(단위: %, 15~39세 연령층 2500명 면접조사)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년 후, 빈 일자리 생긴다고 어떻게 장담하나?”

#안파고_5년후_예측??

#그와중에_4차산업 #일자리상실의시대_커밍순

: 청년실업 문제는 해외 대부분의 나라가 겪는 공통의 문제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현재 일자리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청년 인구가 줄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한다고 빈 일자리가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이알고싶다

유승민의 청년,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달성”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총량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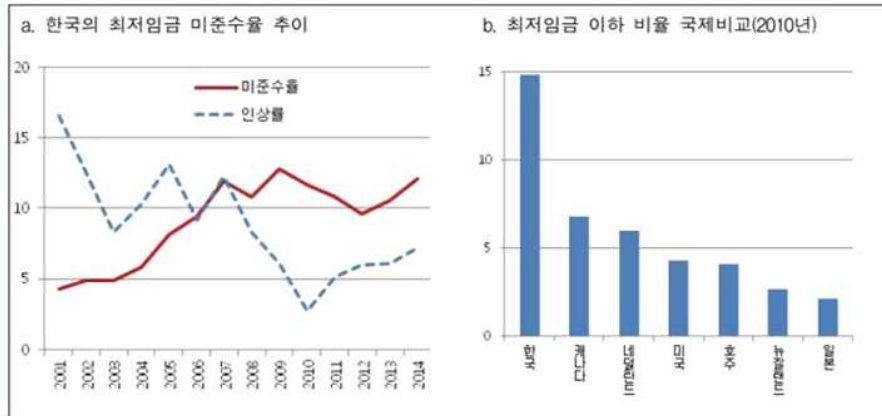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최저임금 못 받는다 π.π”

#헤리야 π.π #최저시급6,470원

: 연 15%라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감소와 영세 사업주들의 몰락을 부추길 수 있다.

[그림 1] 최저임금 미준수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각 연도: OECD(2015, p.44)에서 재인용.

“최저임금 인상이 떠미는 청년실업”

#누굴위한_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이라쓰고_청년실업증가라읽는다

: ‘최저임금 올리자’ 는 구호가 마냥 좋아 보이긴 하나,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악화와 채용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보다, 비정규직도 살만한 세상이 필요”

#공무원_삼성맨_아니어도 #비정규직의_눈물

: 비정규직 총량까지 정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정규직VS비정규직’ 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고착화 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홍준표의 청년, 일자리 정책

“향후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중소기업 청년 초임 200만원 시대 단계적 실현
(청년들의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후 2년간 최저임금의 150%(200만원 수준)을 미달한 경우 미달액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각각 50% 부담)”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 실현”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는 대학 교육비까지 100% 지원

“둘째 자녀 출산 시 1천만원 지원”

“셋째 자녀부터는 1천만원 지원 +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등록금 포함) 100% 지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공약?!”

#내꺼인듯_내꺼아닌_내꺼같은_공약

: 세 공약 모두 실현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며 결국 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돼야”
한강타임즈 2017.02.21. [📄](#)
[한강타임즈]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자신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과 관련, “정부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으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전...

안철수 “중소기업 강화해 일자리 창출...대기업 임금의 80% 보장”
SBS 뉴스 3일 전 네이버뉴스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11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일자리 만드는 데 대기업...

유승민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3안 노동공약” 발표
연합뉴스 2017.02.23. 네이버뉴스 [📄](#)
saba@yna.co.kr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3안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3년 안에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 임금 안정 고용 안전...

“저출산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나?”

#출산수당 #허경영_3000만원
#홍준표_1000만원

: 출산수당 아니냐는 비난도 피해가기 힘들다.
과거 홍준표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해 청년들에게 푼돈 쥐어주는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물론 대상자의 성격이 다르지만 현금지원이라는 포맷은 다르지 않다.

<청년들은 이것을 원한다>

“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 저녁이 있는 삶 ”

“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유리천장 · 유리칸막이가 없는 사회 ”

“모두가 공무원인 세상이 아니라,
공무원 · 삼성맨 · 정규직 아니어도 살만한 세상”



감사합니다.

대선후보 청년공약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방향

김 원 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목차

- I. 서론
- II. 청년 현황
- III. 청년공약
- IV. 청년공약의 한계와 방향
- V. 결론

I. 서론

서론: 청년공약의 중요성

-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포퓰리즘이 될 수 밖에 없음.
- 특히 청년들의 실태는 매우 심각해서 청년들의 표심을 유혹하기 쉬움.
 - 불안정한 직장
 - 청년고용률 하락 추세
 - 낮은 소득 수준
 -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 연공서열제의 일반화
 - Crony society
 - 학벌, 지연, 혈연 등
 - 높은 집값
 - 청년주택보유율 하락
 - 높은 자녀 사교육비
 - 공교육 보완적 비효율적 사교육
 - 학생의 눈높이 교육이 기업의 눈높이와 다름
 - 사교육비는 노후준비와 반비례
-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계층이므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고 스스로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약이 구성되어야 함.

서론

- 득표를 위하여 지출 중심의 공약이 난무함.
 - 로그롤링(logrolling)이 되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함.
- 청년공약의 특성은 경쟁후보와 유사한 공약과 자신만의 공약을 함께 제시함.
 - 후보의 판단에 우선순위가 중요함.
 - 각 후보의 우선 순위는 다른 것으로 판단됨.
- 공약의 평가 기준
 - 공약 실행 결과의 예측성
 - 사회경제적 파급성
 - 타 부문 왜곡 가능성
 - 경제적 타당성
 - 분배적 측면
 - 효율적 측면
 - 민간 자율성

서론

- 청년환경
 - 경직적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
 - 4차산업혁명: Ubernomics, On-demand Worker, Gig Economy 등
 - 낙후되고 폐쇄적인 교육시스템
 - 범사회적으로 비효율적 인력 양성시스템
 - 명문대 4년 프리미엄이 70세까지 유지 가능한 사회
 - 고령사회를 위한 고령자 중심의 정책 편중
 - 포퓰리즘
 - 청년에 대한 감성적 사회적 대응/ 언론, 지식인 등
 - 청년에 대한 형식적 정책 대응
 - 개념적 청년 인권신장
 - 형식적 기회보장
- 경제적 영향: 불확실한 고령화 미래사회
 - 사회적/국가적 활력 상실
 - 청년층 환상/ 좌절
 - 청년특성 상실
 -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쇠퇴
 - 침몰하는 사회

II. 현황

청년 현실

- 대졸이상 실업자 수 최고
 - 대졸 실업자 54만3천명, 전체 실업자의 46.5% (2017년 1분기)
- 대졸 비경제활동인구 최고 (352만8천명)
 - 스펙쌓기
 - 취업준비 등
- 기업정책의 실패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
 - 해외 직접투자 사상 최대 (350억 달러, 2016)
 - 주요 대기업 국내 공장 신설 중단
 - 현대 기아차 1996년 이후 공장신설 중단
 - 삼성전자 2000년 후반 이후 해외 10만명 고용/ 국내 고용 감소
 -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 한국 1위 (531대)
 - 2위 싱가포르 398대, 3위 일본 305대, 독일 301대

청년 현실

- 방황하는 10대: 비취학청소년 43만명
- 청년실업
 - 최고의 청년실업률 10.9% vs 전체실업률 3.7% (2016.5)
 - 청년 체감실업률 20%대
- 비정규직 양산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 20%대
 - OECD국가 중 최저
 -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소득격차 확대
- 고용환경의 악화
 - 비정규직법: 비정규직 증가
 - 최저임금법: 임금하락, 청년실업 증가
 - 인턴 = 열정페이
 - 외국도 열정페이있으나 고용과 연계됨.
 - NEET, 켄거루족 증가: 청년들의 피부양계층화

대선후보 청년공약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방향

9



청년 현실

-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늦은 사회진출
 - 결혼, 출산, 주택 포기
- 사회적으로 고소득고령층 부양자
 - 청년으로부터 노인으로 (공공부문)부의 이전 확대/ 역진적
 - 예: 건강보험, 연금, 연공서열형 노동시장 등
 - 가정에서는 피부양자
- 고령화에 대비한 Lifetime adjust model 부재
 - 경제/금융 교육 부재
- 다양한 부정적 특성: 켄거루족, returoo족, NEET족, 혼족 etc.

대선후보 청년공약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방향

10



연령계층별 임금 비교

<표> 연령별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비교 (2014)

연령	전체근로자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단위: 천원) (B)/(A)
	임금	전체대비 비율	임금(A)	전체대비 비율	임금(B)	전체대비 비율	
전체	2,353	1.00	2,698	1.00	1,305	1.00	0.48
29세이하	1,700	0.72	2,039	0.76	1,046	0.80	0.51
30~39세	2,537	1.08	2,698	1.00	1,572	1.20	0.58
40~49세	2,718	1.16	3,027	1.12	1,431	1.10	0.47
50~59세	2,492	1.06	2,932	1.09	1,401	1.07	0.48
60세이상	1,739	0.74	2,288	0.85	1,179	0.90	0.52

출처: 통계청 DB

- 29세 이하 청년들의 비정규직임금은 정규직의 50% (2015년 70% 수준) 수준임.
- 고령근로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가정할 경우 피크임금 정규근로자 임금의 1/3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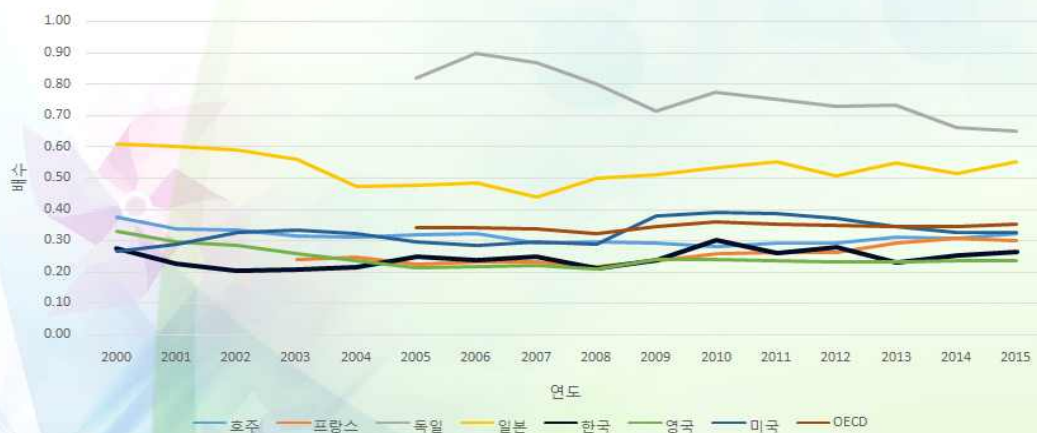
대선후보 청년공약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방향

11



청년근로자 실업률

<그림> 고령근로자(55-64세) 실업률/청년근로자(15-24세)실업률 : 국제비교



-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상대적 불안 정도를 보임.
 - 1에 가까울 수록 불안 정도가 같음을 보임.
- 한국은 고령근로자의 고용만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고령근로자들은 저임금임 (공공일자리 등).

대선후보 청년공약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방향

12



III. 청년공약

문재인 후보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5년간 21조원, 재정지출개혁과 세입 확대
 -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최저임금 1만원(2020년) 인상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공공부문 현행 3%에서 5%로, 민간 적용
 - 취업준비생(18세-34세) 대상 청년구직수당 도입
 - 청년, 신혼부부 집걱정, 임대로 걱정해결: 신혼부부 임대주택 30% 우선 배정
 -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청년 알바 보호/ 알바존중법 등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부담: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공 기숙사
 -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교실 2교사제, 고교학점제, 영유아 사교육 억제
 - 육아휴직확대, 유연금무도입, 아동수당도입, 칼퇴근법, 근로시간단축(1800시간)

홍준표 후보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구조 조정으로 재원마련
 - 청년일자리(기업), 뉴딜정책으로 110만개 창출: 강소기업육성, 기술창업활성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 규제개혁으로 기업 기살리기
 - 일자리 창출기업 법인세 조세감면
 -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가정양육수당 2배인상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희망 사다리: 예산 증가분 활용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비 지급, 대학성적우수자 등록금지원 등
 -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예산증가분, 세출구조조정
 -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 보육 교육은 국가가 책임: 둘째부터 1천만원지원, 셋째 자녀교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창업기회 확대: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 청년일자리 및 주거 및 복지 확대: 대학생 교통할인 30%, 글로벌 청년인재 10만명,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청년전담부처 신설

대선후보 청년공약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방향

15



안철수 후보

- 교육 과학기술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교육부 폐지(국가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처 도입), 학제개편(5-5-2-4)
-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일자리 및 교육 예산 조정
 - 5년 한시적 청년고용보장_중소기업취업자 2년간 1200만원, 구직자 6개월간 180만원
 - 공정한 보상시스템으로 임금격차 해소
 - 비정규직 남용방지: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공공조달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불이익
 -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 단축
 - 일자리 창출형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재정지출 합리화, 세출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재정으로 조달
 -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적용 확대
 - 저출산 극복: 출산전후 휴가 기간 연장과 국가책임 강화, 출산관련 비용 국가지원 확대
 - 가족 기업 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아동수당 도입
-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평등 사회구현: 성평등임금공시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저출산휴가 30일 보장,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대선후보 청년공약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방향

16



유승민 후보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정우선 순위 조정, 고용보험기금 등,**
 - 육아휴직 3년법: 민간기업근로자들에 확대,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조정
 - 가정양육수당 2배인상
 -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보육시설 이용율 70%로
 - 초·중·고 등학생 아동수당 10만원
 - 초등학교 돌봄, 공교육 강화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정지출 절감 및 고용보험에 재정 지원**
 - 칼퇴근법: 퇴근후 SNS 제한,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 노동개혁: 비정규직 축소, 차별시정 및 징벌적 배상,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저임금자 체불 정부 우선 지급, 청년실업부조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확대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대학입시를 학생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대학별 논술 폐지
 -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
 - 자율학기제를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 자사고 외고 폐지, 개별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심상정 후보

-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 고용안정 및 소득불평등 해소
 -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관계 개혁
 -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
 - 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 확대: 간호, 보육, 교육, 소방 등 안전업무, 요양 등 100만개
-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 사회 실현**
 - 슈퍼유연방직법으로 일 생활 균형실현과 여성 경력단절 방지
 - 차별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한부모, 장애, 이주, 성소수자 농민, 북한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강화
-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 모두에게 공평한 생애 첫 출발: 0-15세 병원비 국가책임
 - 흠수저 없는 사회,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국가: 국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

IV. 청년공약의 한계와 방향

청년 공약의 한계

-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없음.
- 핵심 공약이 서로 유사함
- 포퓰리즘 정책은 이미 검증된 사안의 증액 중심임.
- 청년 정책에 예산 및 투자가 빈약/소액임.
 - 미래 매년 치러지는 대선의 최대 피해자일 가능성
- 공약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의 대통령 준비 부족
 -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큰 틀/ 철학 없음.
 - 통일 비전 없음
- 청년공약이 자치단체 제도와 중복되거나 혼선을 낳을 수 있음.
 - 공약의 내용인 상당부분 대통령 선거공약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임.
- 청년부터 노후대비할 수 있는 공약 부재
 - 경제적으로 독립적 세대(generation) 시스템 운영해야 함.
- 미래 부채에 대한 증감도 청년정책 공약임. 미래 부채를 줄이는 공약도 있어야 함.

청년 공약의 경제사회적 평가

- 공약을 보는 청년들의 특성은 달라야 함.
 - 청년들은 결정에 있어서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길게 봄.
 - 미래를 보여주어야 청년 공약은 효과가 있음.
 - 예를 들면, 주거, 보육, 교육, 자녀의 성공까지 예측하고 행동함.
- 청년에게는 실업이 가장 심각함.
 - 청년공약은 실직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보다 기취업자들의 일자리 안정 혹은 안정적 생활 등에 더 초점을 보임.
 - 양질의 일자리 개념은 추상적임.
 - 공공일자리는 사실상 3D임/ 청년들 만족 못함.
- 과잉 청년공약은 청년들에게 족쇄/마약이 될 수 있음. 정부 의존적이 되면 영원히 탈출하지 못함.
 - 청년수당 등
 - 공공일자리 확충은 공시생(현재 공시생 약 25만명, 17조원 사회적 비용만 더 늘일 가능성 큼.
 - 취업하고 있으나 공공일 자리를 원하는 잠재적 공시생도 많음
- 청년공약은 기업에 부담이 됨: 결과적으로 고용 감소.
 - 법제도적 부담
 - 임금/비용 부담
 - 공약실천을 위한 증세 부담: 예를 들면 법인세 인상 등

청년 공약의 경제사회적 평가: 각론

-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재인)
 - 공시생 (25만명 추정, 17조 사회적 비용) 증가 가능성, 기존의 청년 취업자들도 공시생화함
 - 공공부문은 decent work 아님. 단지 안정적 일자리임.
-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 근로자 잠재임금 인상시켜서 중소기업 비용부담 증가, 청년고용 감소, 인력을 감축시키는 자동화 촉진
- 청년구직수당 (문재인):
 - 청년 잠재임금 인상
 - 청년 구직기간 연장시킴으로써 실업자 수 증가

청년 공약의 경제사회적 평가: 각론

- 일자리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재인)
 - 대학재정 압박
 - 실업계 고등학생의 직업교육을 방해
- 대학생 성적 우수자 등록금 지원(홍준표)
 - 대학생 성적 우수자 지원은 지양해야 함
 - 성적우수자는 아르바이트 안하는 고소득층 가능성 높고, 취업에도 유리함.
 - 고려대의 경우 빈곤층 집중지원하고 있음.
- 국민연금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안철수)
 - 현재 정부가 보험료 대납하는 것 아니므로 30년 후 결국 본인부담으로 돌아옴.
-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확대(유승민)
 - 재정부담 증가, 질적 확대 아님.

IV. 결론

결론

- 공약은 선거가 끝나도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 미침
 - 국민들의 새로운 정책 욕구를 촉발함
 - 차기 선거에 재활용됨.
 - 핵심적 공약에 대하여 적극적 분석이 필요함
-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 (고용 증대, 출산율 증가, 보육환경 개선 등)를 달성할 수 있는 공약이 부족함.
 - 사회정책은 사실상 사회적 관행을 고치는 것이어서 목표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림
- 현재의 공약들은 사후 세대간 갈등을 낳을 소지가 많음.
 - 고령자 정책도 청년정책의 고려사항이어야 함.
 - 고령자 부양은 청년들이 부담하게 됨.
 - 예를 들면, '기초연금(최대 비용 복지정책)'은 순수하게 청년들의 부담이 됨.
 - 현재의 공약들은 사후 세대간 갈등을 낳을 소지가 많음.
- 이해 당사자의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창의적인 공약을 통한 과감한 변화 필요함.



감사합니다!

대선후보 청년공약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방향(요지)

김 원 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청년실업이 사상최대이고, 대졸 실업자 수도 사상최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게다가 결혼시기는 계속 늦어지고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임. 육아가 너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출산을 하지 않는 현실임. 청년공약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어야 함.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소득 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므로 효과적인 청년들의 고용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공약이 될 수 밖에 없음. 또한, 청년들은 노인들보다 훨씬 오래 살 것이므로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미래한국에 대한 청사진 혹은 장기적 비전을 고려하게 됨.
- 청년공약들의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당부분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후보들의 준비부족이나 청년들에 대한 인식 (낮은 투표율 등)이 부족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 봄. 그러나 금 번 선거는 높은 실업율, 쏠쏠 등으로 과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임. 첫째는 그 동안 시행되어 온 지원 제도들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지출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이 많음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청년구직수당 등) 둘째, 기존의 사회적 관행을 개혁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임 (고용할당제, 근로시간단축, 5년 청년고용보장 등). 이러한 제도는 모두 청년 혹은 노동공급의 관점 제시된 것이나 고용은 수요자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이 창출되지 않을 것으로 봄. 즉, 수요자인 기업은 사실상 인건비를 높이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시도할 것임. 즉, 청년들에 대한 고용창출 공약은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함. 그러나 기업관련 공약들은 거의 기업들을 더욱 규제하려고 하고 있음.

-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함. 후보 중에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 고용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법인세 감면,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 상당 수 공약들은 관련된 예산을 추정하거나 재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재원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예를 들면 기초연금 인상 등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면 지금보다 지출이 1.5배 늘어나게 됨. 이 비용은 그대로 청년들이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청년표’가 감소될 것임.
- 노인들에 대한 공약은 거의 정부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함. 그러나 청년공약들은 비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효과나 출산율 증대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즉, 청년들의 세금으로 노인들의 표를 매수하는 것임. 당선 후 후보들이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려 할 경우 ‘세대 간 전쟁’을 의미할 수 있음.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 (문재인 후보의 81만개) 는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오히려 취업준비생을 더 양산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이 너무 많아서 국가 자원의 낭비임. 공공부문 일자리 (보육, 간호, 간병 등) 는 현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님. 단지 저소득 안정적 일자리임. 홍준표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민간에서 11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기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므로 정책상 일관성이 있음.
- 최저임금인상은 거의 모든 후보가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업을 늘일 것임.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임. 반도체, 자동차 등은 거의 영향을 안 받음. 중소기업은 청년 고용을 우선적으로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거의 안함. 중소기업은 자동화를 통하여 고용 규모를 줄임. 근로자간, 기업규모 간 양극화가 심화됨.

□ 후보별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음.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임. 오히려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부문에 이양하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함. 홍준표 후보는 대학성적우수자 등록금 지원으로 이는 부자자녀 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 높음. 대학 순위 간 부모 소득 격차 크고 부자 자녀가 공부에 더 전념함. 빈곤층 자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활비도 지원해야 함. 안철수 후보는 5년 한시적 청년고용보장 혹은 취업자에게 2년간 1200만원 지원 등은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더 까다롭게 하고, 제2의 비정규직법이 됨. 지원금도 취업자들의 잠재임금을 높여서 기업 전체에 인건비 인상이 됨. 유승민 후보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아동수당 10만원 등으로 정부의 부담을 높임. 지원금액을 높이는 것 보다는 양육서비스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이러한 공약들은 사실상 포퓰리즘 공약으로 성과 기대하기 힘들.

기초연금과 청년공약

송 헌 재
서울시립대 교수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얘기할 때 늘 나오는 말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노인부양비율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재정부담을 생산가능인구가 감당해야 하는데 현재의 출산율로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일종의 경제지표로 표현된 것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지극히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전망에는 청년층을 노인부양을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이 향후 노인인구를 부양해줄 청년 세대를 위해 이에 합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를 위한 부담만 강요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청년공약은 노인공약과 맞물려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모든 후보들이 노인들을 위한 현재의 기초연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기초연금은 한국전쟁이후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를 지금의 수준까지 올려놓은 세대를 위한 일종의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제도의 정책성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본인의 노후를 미처 스스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국가에서도 이분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를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혜자격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의 성장기 시절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비교적 쉽게 취업하였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자산을 축적했던 세대가 이제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데 기초연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정책적 명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기초연금 지급을 위

한 재원을 청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욱 타당한 투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 성장기에 들어섰고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취업의 관문을 뚫기 위해 치열하게 살다가 넘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인세대의 부양을 위하여 청년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출산 추세를 급진적으로 반전시킬 수 없다면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부양비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젊은 세대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IT 기술의 발달에 뒤떨어지지 않고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이해하면서 현장의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청년을 위한 고용정책의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부 정책의 추가 현재의 젊은 세대와 앞으로 자라날 미래세대를 위한 방향으로 기울기를 바란다. 다만 청년 세대들도 정치권이 이렇게 정책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스스로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청년세대가 기성세대 못지않은 투표율을 보일 때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다.

[토론문_②]

대선후보 청년공약 실현가능한가? 토론문

이 필 우
변호사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토론문_③]

대선후보 청년공약 실현가능한가? 토론문

윤문원
작가

[illegible]

[illegible]

[토론문_④]

대선후보 청년공약 실현가능한가? 토론문

권 용 태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

조 승 수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

○ 취업애로계층 확대

-실업자 135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57만 8천명, 잠재구직자 158만명
(2017년 2월 고용동향, 통계청)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16. 2	2017. 1	증감	증감률	2017. 2	증감	증감률
전 체	1,317 (4.9)	1,009 (3.8)	22 (0.1p)	2.2	1,350 (5.0)	33 (0.1p)	2.5
15 ~ 29세	560 (12.5)	368 (8.6)	-45 (-0.9p)	-10.9	548 (12.3)	-12 (-0.2p)	-2.1
.15 ~ 19세	40 (12.9)	30 (10.0)	0 (-0.2p)	0.3	30 (10.0)	-9 (-2.9p)	-23.3
.20 ~ 24세	214 (13.4)	133 (8.8)	-43 (-2.4p)	-24.6	218 (14.1)	4 (0.7p)	1.6
.25 ~ 29세	307 (11.9)	206 (8.2)	-2 (-0.1p)	-1.0	300 (11.5)	-6 (-0.4p)	-2.1
30 ~ 39세	199 (3.4)	194 (3.3)	34 (0.6p)	21.4	214 (3.7)	15 (0.3p)	7.4
40 ~ 49세	182 (2.7)	138 (2.1)	-7 (0.0p)	-4.6	173 (2.6)	-9 (-0.1p)	-4.8
50 ~ 59세	157 (2.6)	133 (2.2)	-11 (-0.2p)	-7.4	142 (2.3)	-15 (-0.3p)	-9.8
60세이상	219 (6.2)	175 (4.7)	50 (1.0p)	40.0	273 (7.1)	54 (0.9p)	24.9

※ ()는 실업률

2017년 2월 고용동향, 통계청

< 고용보조지표>(단위: %, 천명)

	고용 보조지표1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고용 보조지표2	잠재경제 활동인구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고용 보조지표3
'16. 2월	6.7	483	10.6	1,688	27	1,662	12.3
'17. 1월	5.7	515	9.8	1,790	43	1,747	11.6
'17. 2월	7.1	578	10.3	1,621	40	1,580	12.3

** 잠재구직자에는 구직단념자가 포함되었음

2017년 2월 고용동향, 통계청

- 취업애로계층 전체 341만 명 중, 청년실업자(15~29세)는 56만으로 16.4%, 30~39세를 포함하더라도 76만 2천명으로 20%
-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청년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
- 정년연장,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청년실업 악화

○ 대통령 후보들의 주요 청년일자리 정책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수당
-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으로 110만개 창출, 규제개혁 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기업 법인세 조세감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창업기회 확대
- 교육 과학기술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교육부 폐지, 5년 한시적 청년고용보장, 비정규직 방지,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 단축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과 성장 없는 일자리 정책에 따른 실현 가능성이 문제. 공무원 81만 명을 늘리려면 연봉과 각종 부대비용을 5000만원으로만 쳐도 연간 40조원이 필요한데, 위험 수위에 근접하고 있는 재정 상태로는 감당하기 어려움
- 청년고용할당제, 최저시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새롭지도 않을뿐더러, 부정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

○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정책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가?

- 대선후보들이 나열하고 있는 청년고용정책들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
- 노동시장 진출 시기를 분산시켜서 취업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사회진출 후 취업까지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원정책으로 보완하거나, 청년들의 기대와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줄여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 없이 가시적인 정책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이 일자리 창출력을 저하시켜 청년일자리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결국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을 통한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임. 그러나 기존에 수혜를 받아온 기득권과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바꾸기가 쉽지 않음

○ 미래의 관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때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는 인공지능(AI) 로봇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앞으로 5년 내 500만개의 일자리가 순감하고 고용시장 양극화와 성별 격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

-미래의 일자리는 정부정책과는 무관하게 줄어든 것,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일자리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

-대선후보들의 4차 산업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이나 비전이 없을 뿐더러, 내용과 혁신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

-4차 산업정책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일자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진단도 없이 올바른 청년일자리 정책은 나올 수 없음, 노동이 소득분배의 역할을 하던 시대를 지나 일자리와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근본적 접근이 부재

-결국, 일자리 문제는 청년시기의 문제가 아닌 청년으로 자라나는 과정의 문제로, 교육의 문제로 귀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업을 통해 전통적 일자리 개념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교육부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나와 있듯이 초·중·고등학교까지의 진로 탐색과 체험, 특성화, 현장체험 등의 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용부에서는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과 협조를 하고 교육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고용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일자리와 노동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적 운영 필요

[illegible]

[illegible]

